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VOL.35

2024.11.1.~2024.11.30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□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(11.19.)

- 중견련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, 한국중견기업학회와 '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'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출된 상속·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·야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
-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·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힘

□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(11.26.)

- 중견련은 26일 발표한 '미국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' 결과에서 중견기업의 76.4%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
- 중견기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'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(20.9%)'가 시급하다고 강조

□ 중견기업 기업승계 의견조사 (11.28.)

- 중견련은 28일 발표한 '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' 결과에서 50%에 달하는 현행 상속·증여세 최고세율이 '높다'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.4%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히며,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 등 과도한 현행 상속·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시
- 중견기업의 74.4%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'공제 한도 확대(52.5%)', '공제 대상 확대(21.3%)', '사전·사후 요건 완화(21.3%)'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동향

□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혁신적·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(11.1.)

- ▲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 심의 및 수의계약 허용, ▲ 국가장비 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소요기간 단축 (4개월 → 2개월), ▲ 연구장비 계약체결·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, 강력 제재처분 등을 추진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(11.6.)

- 8개 시·도(대구·부산·전남·경북·전북·경남·대전·제주)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, 울산·세종·광주·충남·충북·강원 6개 시·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
- ▲기회발전특구 이전·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*, ▲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제도 도입, 기업발전특구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
- * 적용대상: (現) 중소기업/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→ (改) 중소기업/전체 중견기업
공제한도: (現) 최대 600억 원 → (改) 한도 없음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(11.11.)

- ▲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, ▲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, ▲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* 등을 추진
- * ▲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및 탈법행위 감시, ▲현저한 부당특약의 사법(私法)상 효력 무효화, ▲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하는 '금지청구권' 도입

□ [기획재정부]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(11.14.)

- ▲의료·통신 분야를 우선('25년)으로 전(全)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, ▲방산·조선·원전·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·보수·점검(MRO) 시장 육성, ▲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및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, ▲향후 5년간('25년~'29년) 66조 원 규모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등을 지원

□ [기획재정부]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(11.27.)

-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소부장·팹리스·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및 반도체 펀드에 대한 투자를 본격 집행
- ▲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, ▲기업의 R&D·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, ▲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&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, ▲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등을 추진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입법동향

1 정부

□ [환경부]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(11.4.)

- ①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, ②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의 세부 사유, ③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내용을 담음

□ [공정거래위원회]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(11.5.)

-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*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

* 하도급법 제18조(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)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됨

□ [기획재정부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11.11.)

-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중소기업에 대한 ①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, 100분의 30으로 설정, ②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(~'26년 12월 31일) 등의 내용을 담음

2 국회

✓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□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(이철규 의원, 11.11.)

- ▲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, ▲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, ▲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·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 의원, 11.14.)

-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·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

✓ 법제사법위원회

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 의원, 11.15.)

- ▲최대주주 의결권 3% 제한 폐지, ▲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내용을 규정

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 의원, 11.19.)

- ▲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, ▲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,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, ▲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, ▲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규정

✓ 정무위원회

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 의원, 11.5.)

- ▲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, ▲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

□ **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 의원, 11.5.)**

- ▲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, ▲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

□ **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주 의원, 11.13.)**

-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 공시를 의무화

□ **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 의원, 11.26.)**

- ▲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(5억원 → 10억원), ▲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

✓ **기획재정위원회**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 의원, 11.4.)**

- ▲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 추가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(2030년 12월 31일), ▲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 연장(~'30년 12월 31일), ▲수도권과밀 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

□ **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 의원, 11.5.)**

-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 상향(5억 원 → 9억 원)

□ **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 의원, 11.5.)**

-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

□ **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 의원, 11.13.)**

-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 의원, 11.13.)**

- 신성장 ·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 · 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(~'27.12.31)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 의원, 11.14.)**

- ▲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, ▲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%로 확대(기존 15%), ▲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

□ **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 의원, 11.15.)**
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규정

✓ 환경노동위원회

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 의원, 11.4.)

- ▲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하한 기준으로 변경, ▲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, ▲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 등을 규정

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 의원, 11.7.)

-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를 위해 ▲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, ▲위반행위의 자진신고,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

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 의원, 11.12.)

- ▲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 및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, ▲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·절차 마련 등의 내용 규정

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 의원, 11.19.)

- ▲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, ▲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규정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지원사업

□ [산업통상자원부] 2025년도 소재·부품·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(11.18.)

-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* 수요·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·부품·장비를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라인 등에서 성능 평가·검증(TRL 7~8단계)을 지원
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, 기계금속, 전기전자, 기초화학, 바이오, 우주항공, 방산, 수소